

반-윤석열전선을 넘어서는 사회운동의 다른 전선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운동의 더 넓은 전망 모색
: 윤석열 퇴진과 심판에 다 담기지 않는 이야기

2023. 08. 09. (수) 오후 7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다른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모임

－ 목차 －

[발제]

-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시작하자 1P
-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토론]

-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
다른 길을 내기 위한 다른 상상력이 목마르다! 12P
- － 선지현 (충북지역 활동가)

- 우리가 새로운 세력이 되자 14P
-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 체제전환을 위한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상상 16P
- － 이을 (노동조합 활동가)

- 우리는 무엇을 체제의 전환으로 그리는가 21P
- : 체제전환을 위한 재생산정의 운동의 방향과 만남을 고민하며
-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인권운동은 어떻게 체제전환운동과 만날 수 있을까 23P
-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 <안내>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 모임 26P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시작하자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1. 들어가며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지지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움직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농민과 간호사 집단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으나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올해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전방위적 탄압에 나섰다.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주민의 ‘불법체류’ ‘투표권’ 등을 문제 삼으며 혐오를 선동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전장연을 직접 공격한다. 거의 유일하게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최근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침을 밝히며 ‘젊은 청년들’까지 문제 삼았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인 것처럼 모욕한다. 여성청년은 저출산 주범으로 몰리다 못해 취업에는 관심 없고 ‘시럽’에만 눈독을 들이는 이들이 되어버렸다.

사람들도 윤석열 정부에서 삶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는 희미해졌지만 삶의 위기는 오히려 농후해졌다. 일자리와 소득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고물가의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가계부채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쌓이고 있다. 빚 내야 살 수 있고 빚 갚다가 죽어가는 시대다. 저마다 가지는 삶의 시간표도 흔들어놓는다. 노동시간 늘리겠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낮추겠다 등 삶을 휘청거리게 할 문제들에 준비되지 않은 말을 던졌다 주워 담기를 반복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기는 재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국가는 등장하지 않고 ‘무정부상태’ 해시태그가 확산된다.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외교 정책까지.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사라질 수 없다. 불평등과 부정의의 촘촘한 구조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나 실업급여 개악 시도를 순순히 허용하지 않는 여론의 형태로, 젠더관계를 강화하는 가족주의에 포획되지 않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통계의 형태로도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의 운동은 이런 의지와 희망을 잘 조직하고 있을까. 무언가 더 나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절망과 냉소를 벗어날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을까. 각자도생의 시대, 자신의 삶과 우리의 세계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집합적 요구와 대안으로 조직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운동의 역할이다. 이 글은 사회운동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 미분화라는 관점에서 진단하며, 체제전환운동이 독자적 전망을 가진 세력으로 등장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피려고 한다.

2. 윤석열 심판과 퇴진, 다음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취임 이후 두 달도 되지 않아 하락세를 보인 후 30% 대에 머물러 있다.

취임 1년 즈음의 부정 평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회운동에서도 평가 토론회들이 이어졌다. 검찰독재, 민주주의 파괴, 정치 실종, 반노동, 한반도 전쟁위기, 민생 외면, 여성/성평등/젠더 지우기 등 여러 진단이 쏟아져나왔다. 개별 부문이나 영역에서의 대응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전선으로 함께 모일 필요 있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그러나 반-윤석열 전선이 민주당의 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앞에서 지 지부진하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도하는 윤석열 퇴진 촛불은 작년 8월 시작되었다. 못다한 검찰개혁 완수와 김건희 특검 등이 주요 요구였다. 퇴진 촛불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심정을 느끼면서도 퇴진 촛불로 모이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퇴진 촛불의 핵심 요구가 민주당이 국회에서 반복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진 촛불은 그보다 더 나아가고 싶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대안으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박근혜를 퇴진시킨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기득권 지키기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가 퇴진 촛불의 한계를 규정하게 된 셈이기도 하다.

사회운동에서도 퇴진 촛불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민주노총 등 노동빈 4개 단체 이름으로 윤석열퇴진운동본부가 제안되었다. 올해 5월 노동절, 건설노동자 양화동 열사의 분신 이후의 일이다. “윤석열 정권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심정에 더할 것도 뺀 것도 없다. 발족에 앞서 열린 집담회¹⁾에서는 윤석열 퇴진 투쟁이 민주당의 성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이는 윤석열 퇴진이라는 같은 요구를 내걸면서도 퇴진촛불과 구분하려는 의지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24년 총선을 향해 가는 동안 야권연대로 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민주노총의 현 집행부와 진보당 등이 보여온 경향에 대한 우려와도 닿아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해야 할 것은 퇴진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의도’가 아니다.

정권 퇴진 요구가 대통령만 바꾸자는 요구였던 적은 없다. 독재 정권에 맞서 정권 타도를 외치던 시절,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추자는 요구에 머물지도 않았다. 99년 민주노총이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할 때 그 목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였다. 정권 퇴진은 사회 변혁의 총체적 열망을 반영하는 구호이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퇴진 요구는 그렇게 인식되지 못한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세상은 그대로인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퇴진 이후의 사회가 민주당의 수준에 한계 지어진 채로 상상되는 한 변화를 바라는 대중을 설득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퇴진 전선의 한계는 퇴진운동을 제안하는 이들의 한계가 아니다. 윤석열을 심판하든 퇴진시키든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회운동이 대중적으로,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현재야말로 우리가 토론해야 할 과제다.

3. 왜 변혁의 열망은 반보수 전선 앞에 멈춰있는가

1) 분화하지 못한 전망

사회운동의 위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표방한 개혁 과제에서도 또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처럼 내놓고 안하겠다는 과제도 있었다. 그러나 개별 의제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선된 점들이 없지도 않다. 대중적으로 52시간과 69시간처럼 현격한 차이로 드러나기도 한다. 사회운동과 공유하는 과제도 적지 않으니 그나마 낫다고 여기게도 된다. 그러면서 반보수 전선으로 다시 귀결되는 양상이 반복되어왔다. 개별 의제들에서 더 급진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요구했는지언정,

1)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주최, <윤석열정권퇴진투쟁을 위한 집담회>, 2023.6.14.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민주당과 다른 전망을 밝히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시작부터 대선 패배 직후까지도 영혼을 걸었던 검찰개혁은 ‘조국사태’를 거치며 사회운동의 미분화 상태를 혼란스럽게 드러냈다.

한국사회에서 (특히 87년 이후) 검찰은 공안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권침해의 핵심 기구였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과제였는데 검찰은 ‘기업에는 솜방망이, 노동자에게는 몽둥이’ ‘성폭력 피해자는 의심하고 가해자는 이해하는’ 조직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구조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며, 인권침해는 총합으로서의 공안기구에 내재한 속성이었다. 이를 고려하지 않자 검찰의 권한이 문제의 근원으로 제시되는 검찰개혁 물신주의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으로 보냈고, 법무부장은 검찰총장과 싸웠다. 대선 직후 민주당은 위법적인 위장탈당까지 감행하며 김수환박 총력전을 벌였다. 검찰개혁이 ‘조국사태’를 마주했을 때 사회운동의 일부는 검찰청 앞에서 ‘조국수호 촛불’을 들었다. 민주주의를 갱신하는 과제에서 다른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민주당과 가까운’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가 1위로 지목됐다.(43.1%) 그런데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에서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직장상사(37.9%)였다.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는 상황 2위가 ‘직장 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33.8%)라는 데서도 정치와 언론이 주목하는 인권 문제와 대중의 경험에 괴리가 확인된다.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 자체에 몰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건설노조 간부를 검찰이 수사하느냐 경찰이 수사하느냐의 차이 이상이 되지 못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지만 법무부가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가로막고 심지어 국제인권기구까지 가서 당당하게 반대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야당 대표 수사하고 대통령 부인은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둘러싼 보수 양당 간 분파 투쟁일 뿐이다. 검찰개혁으로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라서 문제라는 말은 얼마나 다를까.

2)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민중주의

우리 자신이 들었던 촛불이 민주당에 대한 기억 이상을 남기지 못하게 된 역사는 촛불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의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80년대 운동의 경험을 공유한 이들이다.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거나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것은 (노동3권을 후퇴시키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지만)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들이 보이는 차이다. 통일운동이 조직되던 시기의 세계관은 대북관계나 한미일동맹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중운동과 함께 성장한 정치인들은 그 태도와 감각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제천화재에서 문재인은 “유가족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태원참사에서 윤석열이나 이상민의 태도와는 수준이 다르다. 여러모로 사회운동과 더 친화적으로 보이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민중주의’가 있다. 민중주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도덕적인 잣대로 접근”할 뿐이다²⁾.

‘소외된 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민중주의의 이상은 80년대 운동이 대중과 호흡하는 방식일 수도 있었다.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점차 감소하고 스스로 중산층으로 여기는 이들도 늘어나던 시대³⁾. 그러나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양극화된다. 97년 총파업은 노동계급의 형성

2) 김정환, <비혁명의 시대>, 빨간소금, 2020. 책의 1부 2장 ‘민주화 세대의 역사적 좌표’에서 김정환은 ‘민주화 세대’가 변혁을 위한 이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사회적 약자나 하층에 대한 정서적 연대’와 ‘지배 엘리트의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민중주의’에 멈춘 현실을 짚는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기획과 결합할 수도 있었다.

3) 구해근, <특권 중산층>, 창비, 2022. 구해근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이 와해되기 시작한 동시에 중간계층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특권 중산층’이 등장했다고 분석한다. 이들의 불안이 사회 문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수록 불평등의 문제 설정이 왜곡될 수 있다.

을 기대하게 했으나⁴⁾ 정리해고와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면서 계급 정치는 난항을 겪었다. 중간계층에서의 상층과 하층의 격차도 점차 커졌고 민주당 주류는 더욱 상층으로 이동했다. 이념의 공백을 메워주던 현실이 변하자 노동자민중과 멀어지고 중산층도 대표하거나 설득하지 못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상징을 독점하며 ‘진보’를 자처했지만 그들의 민중주의는 보호주의로 전락해갔다. 스스로 태동시킨 차별금지법을 ‘소수자 보호법’으로밖에 보지 못하며 먼저 포기하게 된 이유다. 차별 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그 목적은 ‘건전한 시민공동체’일 때 여성도, 노동자도, 성소수자도 민주주의의 주체로 초대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과제도 있다. 그러나 저임금 구조에 대한 개혁의 전망 없이 반발 여론에 밀려 산업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에는 진전이 없었다. 그들이 강조하는 ‘민생’에서 민중은 추상적 모습으로만 존재한다.

노조법 개정 과제처럼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사회적 여론이 모아져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려는 것이 아님을 짐작하는 어렵지 않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 정치인 진출이 늘고 각종 제도화를 이룬 듯했지만 비정규직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를 이들은 다룰 수 없었다. 차별과 혐오, 백래시에 노출되는 여성과 소수자의 곤경은 성숙하지 못한 문화나 심리의 문제로 다뤄질 뿐 다른 정치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미투운동은 여성/폭력 의제로 축소되었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연결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제도적 권력으로 의제를 선별하며 개혁을 자처할수록 정치의 문제가 집권세력의 문제인 양 환원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민주당의 민중주의는 보수양당 구도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나은’ 이유가 아니라, 다른 정치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관념일 뿐이다.

3) 그래도 민주당이 낫지 않다

사회운동의 전망이 분화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거버넌스도 있다. 민주당 정부일 때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에는 사회운동과 가까운 전문가나 단체 출신 활동가들의 참여가 늘어난다. 더 나은 전문가들이 들어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근본적 구조에의 개입이라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⁵⁾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자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 모든 위원회가 관찮았던 것도 아니다. 21년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쫓으며 자본에 의탁하는 경로를 만들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배제’라는 문제 외에 우리 삶이 어떻게 후퇴하게 되는지 체감하는 대중은 많지 않다.

민주당의 민중주의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될 수 없게 되던 시기 사회운동도 대중조직의 약화를 경험하게 된다. 대중의 힘이 분출하는 계기들이 있었으나 어딘가로 조직되고 축적되지 못하고, 진보정당도 사분오열을 거듭하며 단단한 거점이 되지 못해왔다. 의제나 개별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운동들이 거버넌스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과거의 네트워크에 기대는 거버넌스는 운동사회 안에도 위계를 만들고 운동의 사유화 경향을 강화시켰다. 이는 박원순 사망 사건 이후의 충격과 혼란에서도 확인되었다. 사회운동의 새로운 세대들은 ‘청년’으로 호명되며 불려나가기도 했지만 새로운 운동질서가 형성되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돌게 됐다.

사회운동의 힘으로 거버넌스가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가 사회운동의 힘을 더욱 소진시키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소통과 참여, 협치와 같은 이름으로 자신들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거버넌스는 민주당이 체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해온 통치양식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반복적으

4)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2002. 책은 97년 총파업을 언급하며 8장 ‘기로에 선 노동계급’으로 열린 결론을 남겨두었다.

5)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2023.5.8.

로 확인될수록, 당면한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래도 민주당이 낫지 않냐”는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자. 그래도 민주당이 낫지 않다. 당신들이 가자는 미래는 우리가 떠나온 과거다.

4. 다른 미래를 바란다면

1) 보수 양당이 공모하며 만들어낸 현재를 직시하자

윤석열 이후 정치가 실종됐다는 한탄이 늘었다. 그러나 정치의 실종은 정치의 사법화가 오래된 결과일 뿐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논쟁에서부터 정치적 사안을 사법절차로 이양하는 역사는 오래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문제 외에도 사회관계 전반의 사법화 경향을 만들었다. 최종 심판자로서 법이 정의를 대체하는 만큼 검찰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도 생겼다. 정치란 적대하는 진영(정치적 부족)이 ‘정쟁’을 벌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문재인은 ‘적폐 청산’을 외쳤고 윤석열은 ‘전 정부 트집잡기’라는 윤석열식 적폐청산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와 윤석열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은 국화를 거치나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유의 가치를 왜곡하는 데서는 차이가 없다. 윤석열의 법치 만능주의는 이런 조건에서 꽃이 피었다. 영아살해도 재난참사도 전세사기도, 문제의 해법은 ‘처벌’이 된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문제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에 매진한다.

보수양당은 포장만 달리했을 뿐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앞장서왔다. IMF 이후 ‘정리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철되기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기간제, 파견제가 고착화되었다. 일자리 안정성 파괴, 노동시간 유연화, 근로 연계 복지, 사회공공성 후퇴, 민영화와 영리화 흐름은 한결같다. 돌봄/사회서비스가 시장화되고 그만큼 여성화/불안정화되었다. 일-가정 양립은 지원이 아니라 숙제가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가장 낮은 노동조건으로 밀어넣으며 ‘다문화’는 동화정책으로 혐오만 강화시켰고 ‘귀족노조’ 프레임 등으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면서 사회 갈등이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촛불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인국공 사태 등), ‘군가산점’ ‘무고죄’ ‘남혐’ 등 여러 레퍼토리로 남성의 역차별 주장이 등장할 때, 정치는 집단의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 노동자가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안티페미니즘을 ‘청년’ 세대의 문제로 정식화하며 페미니즘을 문제 삼는 데 동조했다. 공정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게 된 불평등의 구조는 그대로 두니 윤석열이 ‘공정’을 이어받았다.

공정과 법치는 윤석열만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보수 양당이 강화해온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가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이 문제다. 한국사회가 놓여있는 구조적 조건을 살피며 우리의 위기를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져가야 한다.

2) 한국 정치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놓여있다는 진단은 새롭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유효기간 다했으나 또렷한 위기 타개책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양상은 분명하고, 조금 나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중국 역시 성장의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임금 감소가 나타나 자본의 위기가 대중의 삶의 위기로 전가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세금을 올리며 재정 확장으로 대응하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감세를 추진하고 재정 긴축 기조를 고수하며 임기응변 식의 대처조차도 안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로 투자를 촉진하여 민간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히지만 자본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다. 윤석열은 ‘친기업’이고 싫어하지만 자본의 출구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한계기업이 너무 많아 기업을 지키는 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008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과 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깔려 있다. 한국에서는 전세사기/역전세라는 모습으로 주거세입자에게 위기가 전가되고 있다. 97년 이후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자영업이 점차 확장되었는데 팬데믹 시기 급증한 대출이 취약자주 문제로 실업률을 견고 있다. 돌봄은 여전히 ‘가족 아니면 시장’이라는 선택지를 오가며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규범 현대화’를 기조로 노동의 권리를 허물어뜨리기에 여념이 없다. 노동탄압은 전방위적인데, 이는 방향을 못 찾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자본의 위기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국제질서 변동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 있다. 미국 대 소련으로 상징되는 냉전 시대를 지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형성된 공생관계⁶⁾는 새로운 대립 질서로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감행하면서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동아시아에서는 대만해협 위기와 북핵 위기가 전쟁 가능성을 낳고 있다. 팬데믹 이후 불안정해진 공급망은 식량, 에너지, 반도체 등을 건너다니며 위태로운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과 맞물리며 국제질서 재편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동맹 강화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뿐 경제적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3) 다른 비판, 다른 전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조건이 한국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는 점은 보수 양당 사이의 지대를 탐색하는 다양한 ‘제3세력’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제3세력’은 보수양당이라는 견고한 구도는 흔들 수 있을지 모르나 체제를 흔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자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망과 대안을 체제 내로 가두지 않을 다른 비판과 다른 전선이 필요하다.

‘안미경중’은 한국이 균형외교를 잘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가 공생적 경쟁관계였던 조건에서 가능했다.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는 미국을 권위주의의 국가에 맞서는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평가하며 전장에 방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중국이 자국 인민의 저항을 탄압하는 것을 외면한 채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진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나 경제적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접근도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 반도체산업의 활로를 걱정하며 반도체산업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에너지와 물을 과다 소모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경제외적 문제로 은연중에 놓아서도 안 된다.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경제 발전의 전략으로 제시될 때 산비탈을 깎고 농지를 뒤덮은 태양광 전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보수양당은 대북관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민주당 정부의 접근도 북한의 신자유주의적 포섭으로서의 경험⁷⁾을 넘어서지 못했고 ‘군사강국’이 자주주의 구상이라는 점에서 평화의 길이 될 수 없었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지금 우리에게도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다른 구상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본 민중도 동반자로 끌어들여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굴욕외교가 아니라 친핵외교다. 보수양당이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는 동안 우리는 일의 세계와 가족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하는 전망을 내놓아야 한다.

보수양당의 정치와 사회운동을 좌우가 있는 하나의 스펙트럼에 위치시키고 후퇴나 진보를 상상하는 관성을

6) 홍호평, <제국의 충돌>, 글항아리, 2022.

7) 박현옥, <자본의 무의식>, 천년의상상, 2023. 6장 남북통일과 자본주의적 패권 참조.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다른 방향의 벡터⁸⁾를 만들어야 한다. 촛불 이후에도 미투운동과 노동안전운동, 차별금지법제정운동, 기후정의운동, 주거권운동, 장애인차별철폐운동 등 이미 다른 전망을 열어온 운동들이 있다. 노동조합과 여러 조직들에서 새롭게 사회운동의 역사를 써나가는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이 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전망을 유실하지 않으려면 여러 운동들이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결집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망을 구조적 모순의 양상을 바꾸는 데 한정하지 않고 구조 자체를 변혁하는 데로 열어가자는 지향을 (기후정의운동의 성과에 기대어) ‘체제전환’으로 표현해보자. 그리고 지금 여기 사회운동으로부터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시작하자. “윤석열 정권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면 땅을 바꿔야 한다.

5. 우리 자신의 전망으로 세력화하자

1) 존엄과 평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체제전환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지킬 노동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하나의 세계로 이어져 있다면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생산은 불가능하며, 노동이 이윤을 위한 생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면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도 사라질 것이다. 경제의 성장이 우리의 삶과 세계를 파괴해왔을 뿐이라면 우리의 삶과 세계를 재생시키는 관계로서 노동의 의미와 연결을 상상해보자. 생산이 아니라 재생을 위한 세계에서 농사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노동이 아니라 지구를 가꾸고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돌봄 노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전망을 담아 체제전환의 구체적 모습을 그려보자. 우리는 그것을 ‘존엄과 평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말해볼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감축을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담론으로, 전환의 과정이나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왔다. 기후정의운동이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우리의 세계를 변혁하는 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 전환은 일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능킬러문항이 사라진다고 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일의 세계와 교육체제와 가족제도(부의 세습과 재생산 단위)가 모두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사라져야 할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과 세계에서 분리되어있지 않다. 노동, 역사, 관계, 문화 등으로 물질화된 조건을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환이기도 하다. 이때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는 반차별운동의 구호는 정의로운 전환의 또다른 모습일 것이다.

존엄과 평등을 쫓대로 삼아보자. 대체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대체가능한 존재로 죽어가게 만드는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운동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생산자 운동이 존엄과 평등을 지키고 가꿔왔다. 어떤 정체성이든 시민적 자긍심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고유함을 다룰 줄 아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존엄은 물질적 조건이기도 하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받는 임금이 당신을 말해준다. 쪽방에 산다고,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에 평등을 가두지 말자. 누구도 존엄한 삶을 부정당하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것이 세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권리체제를 설계하는 출발선에 존엄과 평등을 놓자.

체제전환운동을 구체적 투쟁과 연결시키며 만들어가기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탄소사회, 과로사회, 시설사회로부터의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꼽아볼 수 있다. 지금의 사회운동이 한국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함께 찾아가되, 탄소사회는 기후, 과로사회는 노동, 시설사회는 차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시키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탄소사회로부터의 전환은 에너지체제와 과소비 체제를 바꾸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비인간동물과 인간의 관계

8)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현실의 사회를 원점으로 하는 여러 방향의 화살표를 떠올려보자.

를 재조직하는 과제이자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와 도시를 바꾸는 과제이기도 하다. 과로사회로부터의 전환도 법정 노동시간 규제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자본이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은 다변화했다.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도 과로를 일으킨다. 소득을 위해 또 다른 일을 하거나 가사/돌봄이라는 숨겨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전업주부’에게도, ‘공공근로’ 노동자에게도- 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과 사회보장의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 서로/함께 먹여살리고 돌보는 일이 가족에, 여성에게, 이주여성에게 떠넘겨 질수록 장애인, 노인이, 청소년이 시설로 보내진다. 이주노동자가 생산의 도구로 들어오고 보내지는 존재가 될수록 비닐하우스 아니면 외국인보호소를 오가게 된다. 시설사회는 삶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고립사회이기도 하다. 시설사회로부터의 전환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족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⁹⁾

각각의 전환은 서로가 조건이자 결과라는 점에서 연결되어있다. 과로사회로부터 전환하는 만큼 탄소사회로부터 전환할 수 있으며, 시설사회로부터 전환하는 만큼 과로사회로부터 전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투쟁이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자.

2) 체제전환운동으로 세력화하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체제전환은 익숙한 말이 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의견그룹의 담론에 머물러있는 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혁명과 다르지 않다. 체제전환운동은 집합적 주체로 공동의 전망을 실현해나가는 힘을 발휘할 때 등장할 수 있다. 많은 운동들은 ‘체제 전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지라도 각자의 맥락에서 체제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왔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와 모순이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적 분석과 제도적 대안 사이에서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세우는 일이 어려웠을 뿐이다. 이것은 개별 운동들이 각자의 힘만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제도적 대안이 구조를 바꾸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정치적 결집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은 문제를 지목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선전을 잘해서 지지를 구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도 같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본령은 사람들이 모여 갈등을 겪으며 문제를 발견하고 집단적 대안을 모색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그 속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고 조직과 제도와 변형된 관계를 남기는 것이 사회운동이 전진하는 모습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정치적이다.

건설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학생인권과 교권, 젠더갈등 등 무한대로 이해관계를 분할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만 누구도 피해자이기만 하지 않은 구조에서 정치적 주체화는 ‘정치적 올바름’을 각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급의식의 각성과 단결이라는 단선적 정치가 아니라 시민됨의 다른 계기와 장소들을 통해 새롭게 계급이 구성되어야 할 때다. 인종화, 젠더화된 방식으로, 자연을 통해서¹⁰⁾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집합적 이해관계를 구성할 수 있을 때 계급도 등장할 수 있다. 대중이 서로/함께 정치적 주체로 만날 수 있으려면 체제전환운동으로 세력화하며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 자체가 불온시되고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 보수양당의 정치가 간혀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순간 분해도 시작되었던 경제위기 이후의 조건에서,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밀어올린 진보정당이 계급도 좌파도 대표할 수 없는 상황. 노동자에 맞글처럼 여성, 청년, 이주민 등을 달아놓는 방식으로 겨우

9) 장애여성공감 엮음, <시설사회>, 와온, 2020. 참조

10) 제이슨 W 무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갈무리, 2020. 무어는 ‘자본주의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틀이 만드는 이분법을 비판하며 자본주의가 ‘자연을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부문별 의제별로 나뉜 사회운동이 전문가나 피해자가 아닌 대중의 거점이 되기 쉽지 않은 조건. 누구에게도 녹록지 않으며 이런 상황을 일거에 바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순간도 그치지 않았던 저항의 힘을 기억하며 첫발을 내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에 동의하는 운동들이 서로를 연결하며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공동의 전망은 우리가 붙들려있는 부정의와 불평등의 구조에서 서로의 투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투운동이 젠더화된 생산양식에 맞서는 저항이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돌봄을 전가하는 가부장제에 맞서는 저항일 수 있도록, 기후정의운동이 자본주의의 속도를 줄여 장애차별에 맞서는 저항이고, 반차별운동이 사회공공성을 재조직하는 저항일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의 투쟁이 사용자의 책임을 넘어서 자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¹¹⁾ 나아갈 수 있도록, 재난참사를 마주할 때마다 높아지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규범적 국가를 호출하는 대신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운동이 만드는 변화를 알아차리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자신의 운동이 전진하는 시간에 다른 운동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 때, 사안별 연대를 넘어선 공동의 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

3) 공동실천의 계기를 만들어가자

체제전환운동으로 세력화하는 과정이 잘 짜인 로드맵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지금 사회운동의 현실이라면 구체적 계기를 만들며 한걸음씩 나아가보면 어떨까. 우선 2024년 총선을 거치는 동안 공동의 전망을 가진 세력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번 총선도 지난 대선과 유사하게 거대 보수양당 구도를 중심으로 치뤄질 것이다. 사회운동이 반보수 전선에 휩쓸리며 자신의 전망을 왜곡하지 않도록, ‘거기서 거기’라는 냉소에 갇혀 정치적 후퇴에 공모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른 길을 내야 한다. 사회운동의 여러 의제와 요구가 보수양당의 구미에 맞춰 선별되고 저울질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의석 수’라는 총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겠지만 체제전환을 시작할 세력을 등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보자.

진보정당운동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운동으로서 총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진보정당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찾는 노력을 배제할 필요도 없지만, 총선이라는 제도정치의 계기에 진보정당과 여타 사회운동의 목표와 전술을 당장 일치시키기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사회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을 우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들이 총선 공동대응을 모색하되 총선 전술보다 공동 투쟁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공동 투쟁의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힘을 쌓아갈 때 총선 공동대응도 유의미한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즉 효과적인 총선 전술이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전환운동이 세력화될수록 효과적인 전술이 가능해진다.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는 구체적 투쟁들이 서로 만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사회운동에서 개별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흐름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연대가 깊어질수록 더욱 많이 더욱 빨리 지지성명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가는 경험은 흔치 않다. 서로 다른 운동이 함께 싸우는 모습은, 개별 의제나 요구를 열거하거나 여러 부문을 안배하는 방식을 넘어서기 어렵다. 우선 하반기에 여러 운동이 계획하고 있는 투쟁들을, 서로 다른 듯 보였던 투쟁이 연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가깝게 9.23 기후정의행진이 조직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성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일 때 파업을 지지하거나 엄호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파업을 만들어볼 수는 없을까.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 장애인운동이 우리의 속도에 세상을 맞추라고 파업을 하고, 탄소 기반 교통시스템의 개조를 요구하

1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불안정노동철폐운동 평가와 전망>, 2023.6.16. 장귀연,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권리개념의 해체’ 참조.

는 기후파업을 하는 등 공동 투쟁 흐름을 기후정의행진에서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주요 계기들을 징검다리 삼아 점차 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10월 주거의날 행진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주거공공성을 요구하며 건설산업에 맞서고, 혼인평등과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로 성소수자의 행진을 해보면 어떨까. 내년 3월 여성의날 집회와 행진에서 ‘체제전환세력이 성평등추진세력’이라고 외치는 공동의 투쟁을 상상해볼 수도 있다.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운동들 간 이해를 깊이 나누며 공동의 전망을 밝히는 포럼을 진행할 수도 있다.

어쩌면 지역운동은 이미 이렇게 움직여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는 이들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응하고 성평등 후퇴에 맞서고 기후위기 현안을 맡고 있다. 서로 다른 대책기구가 엇비슷한 인적 구성으로 연이어 회의를 열기도 한다. 특정 의제를 다루는 단체들의 풀이 넓은 서울지역과 달리 훨씬 더 소진되기 쉬운 조건이기도 하다. 공동 투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다른 과부하가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위한 계획을 초기부터 지역운동들과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개별 운동에 ‘또 다른’ 연대사업이 아니라 ‘하려던 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6. 나가며

개별 운동의 역사는 있을지언정 사회운동의 역사는 누구도 쓰지 않는 시대다. 체제전환운동으로 세력화하자는 제안은 사회운동의 전환에 대한 요청일지도 모른다. 보수양당구도의 문제든 민주당의 한계든, 사회운동이 말하지 않았거나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개별 운동이 각자의 과제에 매몰되지 않고 서로 가로지르며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어쩌면 지루하다. 그러나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역사 자체를 질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사회운동은 80년대 운동의 전망으로부터 얼마나/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지금 사회운동의 역사 쓰기를 80년대로 거슬러가자는 말은 뜬금없고 고루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세력으로서 어떤 지향이나 성향을 가졌든 ‘운동권’으로 사회운동이 분별되던 시대가 운동‘권’의 부정적 기억만 남기고 사라졌으니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와 사회운동의 지형이 역사를 가진 것임을 살필 때 전환의 방향도 분명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도 사회운동은 수많은 부문과 영역으로, 기능과 활동 양식으로 끊임없이 분화해왔다. 분화 자체가 성장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새로움/혁신’이 운동 전체를 갱신할 열쇠인 것처럼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념은 갱신되지 못했다. 진보‘정당’들이 있지만 사회단체들에 ‘진보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는 현실이 그걸 보여준다. 체제전환운동으로 세력화하자는 것은 정확히 분화하되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며 합세하자는 제안이다.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다른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 모든 사회운동이 응답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치열하게 토론하며 다른 길을 내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 전환의 요청이라는 점에서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서 비판하거나 토론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토론은 충분히 했다고 할 때 누구와 어떤 토론을 했는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할 때 방향 없이 의견만 나누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회운동의 현재는 30여 년에 걸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한계이자, 달라지자는 다짐만으로 달라질 수 없는 질서다. 그러나 달라지자는 다짐 없이 전환은 시작되지 않는다.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은 서로의 다짐이 구체적 실천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도전하자는 제안이다.

길내는모임은 ‘도대체 뭐 하려는’ 모임인지 질문을 종종 받는다. 길내는모임은 ‘변혁적 사회운동의 세력화’를 하려는 모임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길내는모임을 궁금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정치조직도 아니고 정당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단체들 간의 상설연대체나 투쟁체를 만들자는 것도 아닌, 모호함 때문이다. 체제전환운동으로 세력화하자는 제안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을 안다. 앞선 역사를 기각할 수도 없고 계승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 체제전환운동으로 자신을 역사화하려는 운동이 많아질수록 제안은 더욱 또렷해질 것이다. 공동의 역사 쓰기를 도모할 때 앞선 역사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길을 내는 방법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하며 아주 조금씩 우리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닐까. 최근 읽은 소설에서 인용한 노래 가사로 글을 마친다¹²⁾.

“우리는 질 수도 이길 수도 있겠지만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진 않을 거야.”

12) 지넷 윈터슨, <프랭키스슈타인>, 민음사, 2023. 노래는 이글스의 ‘맘 편히 먹어(Take It Easy)’.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 다른 길을 내기 위한 다른 상상력이 목마르다!

선지현 (충북지역 활동가)

1. 반윤석열 전선 - 민주당에게 성과를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문제의식들이 모여 반윤석열 전선을 넘어서자고 얘기한다. 지난 20년간 적지 않은 이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왔다. 그래서 변했는가? 변했다. 보수 양당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여러 사건과 통계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권퇴진 투쟁을 앞두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를 경계하는가? 정치적 성과가 민주당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20년간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맞나?

개인적으로 퇴진운동을 경계하는 것은 민주당으로 정치적 성과가 수렴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운동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다른 길을 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상상력과 다른 실천이다. 그런데 퇴진운동은 우리의 상상과 실천을 예측 가능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과 정도, 결과도 말이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축적해내지 못한다.

진보정치를 봐도 그렇다. 야권연대 - 진보정치 독자성 - 야권연대를 반복해 온 진보정치세력들의 모습은 진보정치에 대한 대중의 냉소를 더 깊게 만들 뿐 다른 길의 상상력을 조금도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구도에 갇힌 독자성, 세력화 논의가 과연 대중을 다른 길로 안내할 수 있나? 이 프레임에도 대중의 선택이 해방으로 향할 리가 만무하다.

좁은 의미에서 사회운동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사회적 이슈에 뛰어들고, 이를 공적인 담론으로 만들고, 변화를 위해 헌신하지만 ‘정권퇴진’과 같은 큰 전선 앞에서는 사회운동 역시 무력해진다. 노농빈을 앞세운 거대한 대중조직에 대한 의존성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대중적인 운동이 되지 못한다는 불안), 현실가능성, 구체전술이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차이 등 무력해지는 요소는 너무나 많다.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역으로 우리를 예측 가능한 행동양식에 가두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개인적으로 목마른 것은 공동실천 또는 대중의 참여가 높은 실천이 아니라 다른 상상력과 다른 실천을 경험할 계기다.

2. 체제전환운동, ‘실체’로 등장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노동위기, 기후위기, 전쟁/평화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가 서로 연결되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전개되는 삶의 위기는 체제적 위기라는 말을 쉽게 수용하게 만든다. 그래서 ‘체제전환’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다 쓴다.

체제전환운동을 지향하는 것을 넘어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여전히 민중이 겪고 삶의 위기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단선적이거나 병렬적이기 때문인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운동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누가? 왜? 무엇을? 하고 있나? 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유행일 뿐.

지역에서 기후정의운동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체제전환이나 기후정의라는 말이 참 모호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실체가 없으니 각자 해왔던 운동 안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운동은 본격화되기도 전에 기존 운동 양식에 스며들어 독자적인 제 모습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발제자는 세력화를 말한다. 실체를 만들자는 말로 이해했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의 세력화는 어떤 모습인가? 그 답을 내주면 좋겠다. 단체 간 네트워크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결의된 개인의 결사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답을 꼭 찾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중 앞에 어떤 이름으로 등장할 것인지는 정해놓고 가야 한다. 다만 연대체가 모여서 더 큰 연대체를 만드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각 사회운동 단체들이 했던 일을 모아서 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체제전환 운동을 당면한 실천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해 어떤 운동을 펼칠지(10개 과제여도 좋고 5개 과제여도 좋고)를 제시하면서 그 운동으로 우리의 실천을 재구성하자고 결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립적인 투쟁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대중조직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에서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적 운동을 만들어내야 하겠지만, 조금은 미력해도 새로운 변화를 담지하면 좋겠다.

체제전환이라는 구호를 당면 실천의 문제로 옮기고, 이를 실행에 옮길 실체를 등장시키는 것은 여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실체의 등장 없이는 다른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든다. 기왕에 할거면 속도를 내보자.

3. 세력화의 시작, 꼭 총선이어야 할까?

지역에서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지방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다. 선본의 목표는 ‘지역페미니스트들의 힘 있는 등장’이었다. 이를 위해 선본은 기존 선거 문법을 깨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비후보 운동에 힘을 실었고, 7명을 후보로 냈다.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재정도, 인원도). 이를 매개로 우리는 페미니스트들을 결집시켰고, 지역사회에 페미니즘 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까...쉽지 않다. 더욱이 정당과의 공동실천...진짜 어렵다.

선거는 블랙홀인 것 같다. 후보없는 선거 대응이란 것도 쉽지는 않다. 지지(또는 낙선)후보를 만드는 운동도, 우리의 요구를 공약으로 포함시키라는 운동도 체제전환 운동의 첫 출발로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자칫 무력감만 커질까 우려도 생긴다. 오히려 총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게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체제전환은 자본에 대한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권에 대한 분노로 자본을 향한 분노와 투쟁은 희미해지고 있는 요즘. 자본에 대한 싸움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기후정의동맹에서 얘기해왔던 에너지 전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자본과의 싸움을 시작해 볼 수는 없을까. 총선 대응으로 한정하지 말고,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의제(이슈)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새로운 세력이 되자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체제전환운동은 나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바람에 닿아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기대와 체제전환 운동의 요구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체제전환이라는 말은 어딘가 거창해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로 바뀌 생각해 보게 된다. (결국 발제자의 제안과 다르지 않지만)

1.

윤석열 퇴진 운동에 왜 끌리지 않는지 곱씹으며 시간을 거슬러 정치의 실패를 떠올린다. 2022년 5월 2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46일간의 단식투쟁을 마무리한 날 우리는 정치의 실패를 선언했다. 이 실패란 무엇에 대한 실패였을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없다는 것. 정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분노, 우리 역량이 정치를 움직일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정과 과연 모든 것을 걸 만큼 총력전이었는가 하는 자기반성까지 모두 진한 아쉬움의 이유가 됐다. 그 모두가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퇴진 요구를 통해 반추해 보는 것은 민주당의 변화에 건 기대가 아니었던가 하는 점이다.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라는 말로 나의 요구, 나의 절실함을 그 막연한 기대에 의탁했던 것이 아닌가. 결국 실패는 그 기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윤석열 퇴진 요구에 나서기 어려운 까닭은 그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정치와 선을 그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문제다. 제정에 이르지 못했지만 2년 가까이 쏟아부은 투쟁은 차제연의 힘을 키웠고 이전과 다른 위치로 이동시켰다. 농성이 끝난 이후에도 평등이 밀려나는 현장에, 지난 시간 평등을 함께 외친 동지들로부터 차제연은 끊임없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차제연의 다음 활동은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논의에 갇혀 있었다. 무엇을 해도 될 것 같지만 그 어느 것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무기력에 붙들려 있다가도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의지가 피어오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투쟁 현장에서 만났던 동료들을 각각의 다른 현장에서 마주치곤 한다. 만나면 한숨이 기본값이다. 한탄이 깊으면서도 다들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 최근에 작년 차만세 때 함께 했던 지역마을활동가들과 만날 자리가 있었다. ‘방어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로 싸우고 싶다. 차별금지법은 없던 것을 우리가 만들자고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런 싸움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이 아닐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는 것, 우리의 요구로 싸워보는 일, 우리에게 걸어보는 기대 같은 것들 말이다.

2.

행성인은 단체의 주요한 가치로 연대를 꼽는다. 노동개약 집회에서부터 출발한 단체의 정체성은 언제나 노동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함께 살피려는 노력과

방향은 나 스스로 행성인에 갖는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과연 이 연대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의제들이 후퇴하는 가운데 연명, 기자회견, 집회, 대응단위 참여 요구가 쏟아진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연명을 했었는지 뭘 놓쳤는지 헛갈릴 때도 있고 여기서 만난 활동가를 다른 대응단위에서 만나 서로 비슷한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무지개 깃발을 드는 일, 피켓팅에 참여하는 일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비슷한 요청들이 반복될 때 이 연대가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연결하고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다. 단지 지쳤다, 무기력하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어쩌면 우리의 연대라는 것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로의 투쟁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나의 전망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편, 최근 우리 사회는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회로 퇴보하고 있다. 서울시청에 대문짝만 하게 걸린 ‘약자와의 동행’이란 현수막은 민주노총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집단이다, 장애인도 소수자지만 전장연은 아니다, 같은 말들에 대조되어 지금 이 사회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조직된 시민은 강자라는 프레임으로 소수자성을 지우고, 다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질서를 훼방 놓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집회 자체를 혐오하도록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는 앞으로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우리 투쟁은 점점 더 고립될 것이다.

3.

조직된 시민은 강자일 수 있다. 그러면 제대로 강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차제연의 힘이 커진 것은 차별금지법은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이란 구호 아래 각각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혼자 투쟁하도록 남겨두지 않겠다는 구호가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연대를 재조직해야 한다. 각각의 싸움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곁을 내어줘야 한다. 이미 이전에 그러한 행동들이 없던 것도 아니다. 봄바람행진은 먼 소식으로 접했던 의제들을 한자리에 펼친 신명나는 장이었다. 올해 여성대회에서 성소수자들은 혼인평등을 외쳤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대구로 향했으며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날 시청 광장에서는 다양한 단위에서 성소수자들이 빼앗긴 광장을 지켰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 투쟁의 동력을 얻지 않았다.

나아가 그러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가망없는 정치에 우리의 요구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에 정치가 따라오도록 더 큰 전망을 그려보자. 총선 즈음하여 각각의 의제들을 정치적 요구로 등장시키는 대화를 공동으로 조직해볼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등장시키며 정치가 해야 마땅한 과제들을 모아내고 변화할 사회를 전망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공동의 기획 속에서 하반기부터 각각의 투쟁들이 큰 흐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조직하고 함께 가고 있다는 공동의 감각을 키워내자. 2024년, 우리가 새로운 세력이 되자.

체제전환을 위한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상상

이을 (노동조합 활동가)

[내가 경험한 특별한 '운동'의 순간들]

1. 운동 의제분야간 융합의 필요성을 확인했던 순간_반올림'활동

○ 삼성전자 백혈병 등 전자산업 직업병 사안의 특성

- 젠더화된 반도체 전자산업 고용현황과 노동조건: 유해물질에 가장 취약한 '오퍼레이터' 직군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차출된 여성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배치
- 젠더화된 산업재해: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생식독성 물질로 인한 직업병 다발, 각종 희귀 직업성암 문제
- 반도체 전자산업으로 인한 지역/글로벌 환경문제: 공장 주변 지역의 오염 및 시민재해(ex. 삼성 수원공장 인근 하천 물고기 집단폐사, 삼성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등), 반도체 제조시 투입되는 많은 양의 물과 전기¹³⁾, 반도체 전자산업의 글로벌 이전(미국>>한국>>중국), 전자폐기물 처리의 문제(중국 광둥성 께이위 마을¹⁴⁾)

⇒ 적·녹·보 연대의 필요성과 효용을 구체적 현실에서 확인

2. 미시적 존재와 거시적 투쟁의제의 연결 필요성을 확인한 순간_성별임금격차 해소 활동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스탑 운동의 특성

- 자본과 노동계급 그리고, 개인 노동자의 성별정체성의 관계에 발생하는 다중차별의 결과인 '성별임금격차'
 - 채용준비와 입직, 배치, 각종 노동조건, 승진, 그리고 퇴직까지 전 노동생애로 이어져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계급×젠더차별을 간명히 보여주는 지표
- 노동자 개인의 성별로 결정되는 새로운 노동계급 '여성'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스탑 / 여성파업>을 제안하며 노동에는 성평등을, 성평등에는 노동을 기입하고 함 → 성평등노동

⇒ 자본vs노동 이라는 거시적 담론 안에서 탈각되었던 성별정체성이라는 노동자 개인의 사유가 성별임금격차라는 거대한 차별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회적 제기

13) “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nm)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정보다 2배 이상의 물과 3배 이상의 전기가 필요” -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니”...잘나가는 반도체업체 '탄소중립' 고민(22.02.27. 머니투데이)

14) “중국의 전자쓰레기, '메이드 인 코리아'”(08.08.04. 오마이뉴스)

3.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운동의 한계를 확인한 순간 : 채용성차별 이슈, 성별임금격차 해소 활동과 장애 운동과의 관계성

○ 채용성차별 이슈의 양가적 측면

- 입직과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행해지는 차별(ex.결남출 면접질문, 채용시험 점수당락조작, 직급·고용형태 차별)은 여성 노동생애에 성별임금격차를 야기하는 첫 포문을 여는 사안이자 심각한 범죄이기에 ‘성평등노동’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
- 이후 채용성차별의 피해당사자가 나타나면서 직접적인 대응하게 된 ‘대전MBC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건으로 더욱 가시화 됨

⇒ 채용성차별 사안의 한계지점: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여성계층만이 주체로 호명, 신자유주의적 욕망과 젠더차별 피해의 억울함이 복합적으로 작용, 채용성차별 해소 이후의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공정 담론의 한계)

○ 성별임금격차 해소 활동과 장애 운동과의 관계성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젠더화된 노동시장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했던 것이 성평등노동운동의 목표
- 제기된 질문 “장애인 노동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이라는 슬로건에 호응할 수 있는, 포함되는 주체인가?”

⇒ 성별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한계: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임금)차별하지 말라’라는 요구의 전제는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노동자라는 것

▲ 운동의 의미와 사회적 효과가 확장될 때, 공정과 법치가 갖고 있는 편리함에만 기댈 수 없는 지점이 드러남

▲ 주류화 전략의 한계

▲ 차별철폐 이후(사다리 경로 정상화) 노동계급 삶에 대한 비전의 부재

▶ 어떻게 다시 삶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언어/운동으로 확장시켜 갈 것인가?

4. 거버넌스의 한계를 확인한 순간_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채용성차별 해소방안 가이드

○ 채용성차별 대응 활동과 정부의 대응방안

- 경과: 2017~2018년 대한석탄공사, 가스안전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공공·금융기관 채용성차별(면접점수 및 합격자 조작) 비리 폭로 → 여성·청년·정당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대응 / 한국여성노동자회 거버넌스 활동 → 2018년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및 관계부처 합동 ‘채용성차별 해소방안’ 가이드라인 발표
- 가이드라인 내용: ▲채용성차별 신고 창구 마련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과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 제작 ▲채용성차별 의심기관 감독 및 제재 강화 ▲면접단계 성차별 예방위한 공공기관 채용 기록 관리 추진 ▲은행 신규채용 합격자 성별비율 공시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 제도정비
- 당시 제도 마련시점의 한계: ‘채용시 단계별 응시자 및 합격자 성비 공개’가 핵심적인 예방대책이었으나, 일자리위의 기업측 반대로 좌초됨

-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성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면접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기록해야 하며, 전체 공공기관의 기록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역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 안내 및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에도 적잖은 수의 공공기관이 범부처적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보아 기획재정부가 관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한 셈이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으로, 당시 의원실 자체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 350곳 중 130곳(43.3%)이 면접 응시자 성비를 수집하지 않고 있었다. 2022년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성비 수집 미이행 기관은 75곳(21.4%)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올해로 4년이나 지났을 뿐더러 의원과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5분의 1에 달하는 곳이 불응인 것은 채용 성차별 해소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TF’를 꾸린 바 있다. 약 1년간 2회 열린 TF 회의에서는 성비 기록 점검 및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올해 미이행률이 21.4%에 달함이 드러났음에도 당장의 활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비 기록) 이행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추후 필요 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TF의 향후계획으로 명시된 성차별 의심 기관 근로감독, 인사감사 연계 등 후속조치는 아직 의심 기관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어 조치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면접자 성비 관리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 역시 도입 추진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안이 없다”고 답했다.

* 출처 :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마련 4년째, 공공기관 5곳 중 1곳 여전히 면접자 성비 관리 안 해 (22.10.05. 대한뉴스)

⇒ 거버넌스로 인한 성과와 한계: 전혀없던 제도 마련의 성과가 있으나,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당시의 정권거버넌스의 인적구성이 훨씬 중요하게 작동, 정권 변동 이후 제도적 성과도 유실되기 쉽상임.

[살아있는 현재의 기회들]

1. 학교급식 폐암 산재 대응과 성평등노동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는 젠더차별의 결과이기도 함: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진보정치운동의 성과가 젠더화된 노동시장 구조 안에서 집행되면서 차별적 결과 야기 → 값싼 중고령 여성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투입, 노동없는 복지제도의 문제 → 낮은 처우, 만성적 인력부족, 잦은 사고성재해와 근골질환, 심각한 폐암 산재까지 연결
 - 최근 노동, 법률, 노동안전보건, 여성, 풀뿌리, 교육, 정당 등의 여러 분야가 모여 대책위가 꾸려짐
- ⇒ 과제: 성평등과 노동차별 철폐 운동의 강한 결속, 범진보 진영 정치적 성과에 대한 발전적/확장적 성찰 등

2.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중요한 고리인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실질임금인 한국의 조건에서 최저임금 상향은 매우 중요¹⁵⁾. 특히, 매년 쟁점으로 등장하는 ‘최임 업종별 차등적용’은 대부분 서비스업,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매우 불리.
 - 최임 의제를 둘러싼 최근 경향: 특고 등 불안정노동계층에게도 최임적용을 요구하는 경향. 특고노동자 적정임금 적용위한 제도마련은 세계적 추세¹⁶⁾.
- ⇒ 과제: 최임 결정 시기 노동조합 외에도 여성주체의 목소리가 조직되어야 함, 불안정노동과 여성노동 주체의 연대전략(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등

3. 과로사 예방, 유통판매직 주말휴식권과 기후위기

- 의제의 중요성: 죽거나 죽을 정도로 아프고 다치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삶의 질 문제.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할 수 있는 노동시간과 쉼/여가시간을 갖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자존과 실질적인 건강(육체/정신/사회)을 위해 핵심적인 사안.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당장 죽지는 않아도 천천히 불건강한 상태에 빠지게 됨. 현재와 같이 근대적 노동 형태가 해체되는 시점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할 의제임, 또한 노동자가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쉼과 여가가 충분히, 적절한 때에 보장되기 위해 ‘공장’을 멈추고 생산중심의 속도를 늦춘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될 수 있음.
- 중요 현안:
 - ① 물류/유통노동자 과로사 예방: 최근 물류/유통서비스업 중심으로 확산되는 과로/야간노동은 과로사회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음. 노동시간을 늘려 임금을 채우는 노동자에게 적정 노동시간 보장과(개수임금제 바탕인 특고직 노동자에게 수수료 인상, 최임 적용, 공짜노동 철폐 등 적정임금 보장) 온라인 유통업 야간노동 제한이 핵심
 - ② 판매직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주말없이 스케줄 근무로 일하는 유통매장¹⁷⁾ 판매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내지 주말노동 가치인정 투쟁이 필요. 이는 365시간 오픈하는 유통매장을 단계 하는 탄소절감 효과로 연결될 수 있겠음.

[핵심은 체제전환의 ‘비전’과 결집의 ‘주체’]

1. 전환된 체제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 “체제전환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지킬 노동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과정”
- 체제전환의 모습,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구심이 형성될 것
- 스스로를 돌보고,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세계 = 돌봄 중심 사회, 돌봄민주주의
- 현재 대중의 의식이 조직되어 있는 분야인 ▲(노동)안전보건 ▲성평등 ▲기후위기와 [돌봄중심사회] 라는 키워드는 참 잘 맞아 떨어진다!

15) 「최저임금, 여성 노동 문제(김양지양, 2018)」 참고

16) 영국의 공정임금제, 미국 뉴욕시 차량호출서비스업 운전노동자에게 ‘표준운임 보장제도’ 적용

17) 마트, 식자재 농수산물마트, 아울렛매장,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

2. 분야간 융합, 강한 결속, 경계투쟁.. 이를 위한 주체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까?

- 부족하나마 사회운동은 분야간 공동투쟁, 사회적 거점형성을 위한 연대, 방향성 설정과 대안 모색을 위한 집단적 토론 등을 일정하게 해왔다고 생각함.
- 첫째, 더 큰 연대, 더 강력한 결집을 위해서는 더 큰 범주에서 만나고, 공동의 진단을 내리는 시도가 필요해 보임
- 둘째, 단선적인 정치가 아닌,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다중적 주체 간 결집과 이를 통한 대안정치는 현재의 운동 주체들이 더 성숙한 시민성·계급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 (예를 들어 성평등이나 기후위기 해결이 내 삶의 중요 조건인 노동 조직→반반운동)

우리는 무엇을 체제의 전환으로 그리는가

체제전환을 위한 재생산정의 운동의 방향과 만남을 고민하며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1/

지난해 기후정의행진과 올해의 기후정의파업은 분명 고무적이었다. 그만큼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점점 더 큰 고통이 닥칠 수밖에 없겠다는 위기감을 현실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나아가서 ‘기후정의’라는 운동의 방향이 비로소 개인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운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정의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후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함께 구체화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결국은 체제를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 체제는 어떤 체제인가. 각자가 그리는 체제의 전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생각들은 어떻게 함께하는 논쟁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2/

기후정의, 재생산정의, 장애정의 등 ‘정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운동의 방향은 결국 체제에 대한 고민과 맞닿을 수밖에 없다. 가령 재생산정의 운동에서는 성과 재생산에 대한 통제와 노동의 착취가 인종, 이주 상태,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장애 등에 기반한 사회적 억압 시스템을 만드는 근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피임이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넘어 재생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유지되는 체제의 작동방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재생산정의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할 때 기후정의는 생산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나 기후위기로 인해 여성과 소수자에게 전가되는 고통을 드러내는 데에 머물지 않고, 성장 중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이들의 삶과 재생산의 조건들을 어떻게 관리·통제하고 착취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일과 연결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낸 상황들은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자본이 점유하여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 지역의 공동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만들어온 일, 그리고 이것이 대량의 이주로 연결되어 삶의 관계들을 파편화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진 결과이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가족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이주, 장애, 섹슈얼리티의 관리와 통제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보장이 가능한 가족단위로 사는 사람들보다 취약한 삶의 자원들을 공유하거나 의존하는 비제도적 관계와 동거, 독거, 홈리스 상태의 사람들이 많지만 가족단위에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의 책임을 전가해 온 체제는 다른 방식의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이들을 내버려두고 죽게 만드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재생산 통제가 오늘날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체제의 근간이자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전가를 만들어낸(그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체제전환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으로 함께 이어나갈 수 있을까?

3/

개별적인 이슈로 보이는 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문제의식을 확장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보자.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이대남의 표를 얻고자 여성혐오를 정치 전략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그만큼 이전에 비해 여성을 생산 노동력으로 추동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이미 2017년에 13차 인구포럼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연구원이 발표하여 크게 비난을 받은 보고서(‘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 결정 요인 분석’)는 “초혼연령을 낮추는 것은 인적자본투자기간을 줄이거나 남녀가 배우자를 찾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소득과 학력수준이 낮은 남성과도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고용시장이 조장하고 있다면 이러한 거품을 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채용과정에서 채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스펙(휴학, 연수, 학위, 자격증, 언어능력)을 명시하고 오히려 채용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게 한다면 일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서 거의 백색음모(white conspiracy)) 수준으로 철저하게 기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이 경제 전략의 차원에서 실제로 고려되고 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부처의 폐지를 넘어 재생산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전에도 여성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해온 역할이 사실상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력 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 예방과 취약층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조차 그 전제 하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부 혹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가족,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떠올려 보라.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거나 강화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력과 재생산을 관리해 온 시스템을 문제삼는다면 여성가족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성 의제’로 한정짓지 않고 보다 확장된 문제의식으로 함께 대응하고 전선을 확대하는 방향이 좀 더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주가사노동자 제도의 도입,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지연과 맞물리며 추진되고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시도 등도 개별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무엇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고, 향후의 체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의도하고 있는가를 함께 분석한다면 체제 전환을 위한 전망과 대응의 문제의식을 연결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결국 ‘반 윤석열’을 넘어서려면 우리 스스로가 전환의 모습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연대, 공동의 대규모 행진 참여 정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현재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과 각 운동 영역에서의 이슈들을 체제의 움직임과 연결하여 함께 분석하고 전환의 상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구체화하는 수준에서의 연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내년 총선을 경유하는 즈음에는 선거에 대한 대응이 아닌 체제 전환의 상을 함께 드러내는 공동행동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그런 과정을 그려나갈 수 있다면 재생산정의 운동의 맥락에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권리 보장 요구에 머물지 않고 재생산정의를 위한 체제 전환의 방향으로서 기후정의, 빈곤, 이주/난민, 장애, 노동 등에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의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고 공동행동의 요구로 만들어가 보고 싶다.

인권운동은 어떻게 체제전환운동과 만날 수 있을까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권운동은 그동안 각각의 의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운동을 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와 실천을 가로지르는 보편적 문제의식 역시 없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적으로 어필하고 묶이는 운동은 ‘반윤석열’ (반국민의힘, 반독재)인 현실은 활동가들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운동의 길을 고민하게도 한다. 바로 그런 것이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이유일 것이다.

그 이유나 해결 방안에 대해 여러 운동에서, 다양한 경험과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고민을 중심으로 어떤 시도가 필요할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인권운동의 고민

특정 계급/존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인권의 시작이었다. 태어난 신분에 따라 누군가는 귀족으로, 누군가는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시대에 이 같은 사상은 혁명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권의 역사는 ‘배제된 존재들’에 주목하며 발전해왔다. 수많은 저항과 운동을 통해 점점 커지고 넓어져 온 지금도 인권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 ‘먼지 같은 존재’, ‘있지만 없는 사람들’, ‘뭉 없는 사람들’¹⁸⁾을 대변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권 담론은 마치 권리와 권리의 충돌로 이야기되는 면이 있다. “너만 인권 있냐? 나도 인권 있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비롯한 차별 시정 조치들에 대해 ‘역차별’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발제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무한대로 이해관계를 분할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영향¹⁹⁾과 함께 사회적 권력 구조와 책임을 묻는 인권의 언어가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인권을 능력을 증명해야 누릴 수 있거나 보상의 개념으로 보는 문제 또한 짚어볼 만하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부터 다하라”는 말에는 인권에 대한 오해도 포함되어 있지만 능력주의 세계관이 뿌리 깊게 자리한 탓도 있다. 인간다운 삶은 마치 노력의 대가이자 고생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이해되며 “누가 더 많이 고통받았나?” 혹은 “누가 더 능력이 있나?”라는 경쟁 구도에서 나아가 “누가 더 보상받을 자격이 있나?”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이 힘을 가진 현실에서 약한 존재들이 놓이게 되는 더욱 취약한 조건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못한다. 차별과 폭력 상황이 개인 간의 갈등으로만 이야기되며 구조적인 이슈로 바라보는 관점이 공유되기도 쉽지 않다. 언제라고 쉬웠을 때가 있었을까 싶지만 이처럼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돌아보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전망을 더 퍼뜨리기 위해 고민을 더해가야 한다.

18) 채효정(2021), <먼지의 말>, 포도밭출판사

19) 미류(2023), “반-윤석열 전선을 넘어서 체제전환운동의 전선을 만들자”

조직화에 대한 고민

요즘 변화기에 가면 꼭 만날 수 있는 각종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들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든다. 그들이 가진 자원을 가늠해보기도 한다. 전국 곳곳에 걸린 현수막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초중고 성교육 강사단 활동 등 조직적 움직임도 눈에 띈다. 그들의 조직 방식, 운영 방침, 주장 및 활동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움직여온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조직화는 모든 운동의 숙제이자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할 고민이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조직화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가부터 만들자는 시도를 해온 지 이제 몇 해 정도 되었다. 유의미한 세력이 되고 영향을 미치려면 조직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반운석열 전선에 집중하게 되는 건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주장, 운동, 대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조직화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각 단체와 운동에서는 조직화에 대해 어떤 고민과 실행을 하고 있을까. 인권운동에서는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신입)활동가 대상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활동가 교육을 개별 단체만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인권운동 전반의 고민과 맥락을 담아 풀어낸 경험이기도 하다.

조직화를 위한 현재의 실천으로는 우리의 운동을 지지하는 주체들의 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회이슈, 쟁점,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은 이야기와 목소리를 주고받는 활동(캠페인, 정기적 소식지/홍보물 발간 등)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 구체적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조직화를 고민할 때 상호부조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삶을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넓은 연대의 가능성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 어떨까.

가능성: 어떻게 체제전환운동으로 모이고 연결될 수 있을까

체제전환운동을 고민한다는 건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탄소사회, 과로사회, 시설사회로부터의 전환’이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열린 <청소년활동가마당>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후정의를 말할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주장했던 학생인권, 입시폐지, 청소년참정권은 어떻게 기후정의와 연결될 수 있을지를 토론했는데 이런 이야기와 자리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다르지만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²⁰⁾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 캠페인은 어린 사람에 대한 하대와 무시, 일상적인 차별을 짚어내고 특히 언어문화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바꿔내기 위한 활동이다. 어린이·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이, 사회적 신분, 특정능력 등에 따라 ‘윗 사람’과 ‘아랫 사람’을 구분하는 일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기도 하다. 또 어린 사람은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미성숙’을 근거로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에 저항하는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른 ‘소수자-마이너’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듯 체제 전환이라는 지향과 다른 길을 내자는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고 확장되며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품고 있다.

자음은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원한다”는 문장으로 운동의 지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회에 ‘좋은 어른’이 많아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린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자신에게 ‘좋은 어른’일지 모르는 채 ‘복불복’ 상황을 반복해야 하거나 몇몇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위치로만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방될 수 없다. 또 ‘좋은 어른’ 되기는 개인적 실천을 요구하지만,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은 사회 구조와 문화, 어린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바뀌길 요구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 나아가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차이가

20)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https://yhrjjeum.kr/ageismcampaign>

의미 있는 구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상상하는 일도 우리의 전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체제전환운동의 지향은 이런 문제의식과 닿아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각 운동의 지향을 우리는 어렴풋이 공유하고 있다고 느낀다. 자칫 이 의제는 무슨 영역, 이 영역은 어떤 의제라는 식으로 구분 짓기 쉽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의제와 쟁점, 지향 등을 모아보며 서로의 전망을 나누는 토론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 과정을 통해 로드맵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같이 그려보자.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길내는모임)은

- 체제에 갇히지 않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며 다른 세계로 길을 내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 시대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다르게 싸울 수 있는 전망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활동가모임입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과 전망에 관한 토론을 조직하고 활동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가모임입니다.
- 활동가들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사회운동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활동가모임입니다.

길내는모임을 함께 만드는 길내는모임원이 되어주세요.

-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로 길을 내고자 하는 활동가와 사회운동 단체.
- 서로 다른 운동과의 교류를 기대하고 촉진하며 품을 내고 마음을 내는 활동가/단체.
- 시간을 내어 길내는모임의 활동에 기획, 준비, 진행,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합니다.
- 회비를 내어 사회운동의 다른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함께 합니다.
- 단체의 경우 회비는 월 2만 원 이상입니다.

2023년 길내는모임은

- 분기별(6,9,12월) ‘내는 회의’에서 전체적인 활동계획과 진행을 논의해갑니다.
- 사회운동의 다른 길을 고민하며 분기별(5,8,11월) ‘쟁점토론회’를 이어갑니다.
- 서로 교차하는 사회운동으로 ‘가로지르길’ 바라며 내년 2월 서로/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길내는 다과회’를 진행합니다.

[신청] 길내는모임원으로 함께 해요



bit.ly/길내는모임원함께

길내는모임 홈페이지 오픈!



bit.ly/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